

517923/선재민/이창관/A 수목23/1회 ()교시(과목)

(20)년도 ()시험 답안지

과 목 명

민 사 소 송 법

수험자
확인사항

1.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수험번호 및 성명 등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
2. 연필류, 유색필기구 및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
3.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및 지워지는 펜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6.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 (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부정행위 처리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자는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당회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을 책상 등에 기재하거나 관련된 물건(메모지 등)을 휴대하여 사용 또는 이를 주고 받는 행위
6. 시험장 내 · 외의 자료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1. 공인어학성적표 등을 허위로 증빙하는 행위
12.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13.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연습지]

성명

수험번호

감독확인란

- ※ 연습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 연습지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연습지]

- ※ 연습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 연습지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연습지]

- ※ 연습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 연습지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문제 1]

I 설문 (1)

1. 본점정리

관할 합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상계되는 관할을
말한다(法29조)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 이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法35조)

(1) 의의 및 취지

법원도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영부를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

1) 학설

① 통설은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소수설은 전속적
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합의를 변경하면서까지
이송을 할 수 없다고 본다.

2) 判例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 전속관할과 달리 합의관할의 성격을
가치기 때문에 법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3) 정도

법원의 심리 적정을 위해 전국적 관할합의 경우 제35조
에 의한 이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J의 주장의 타당성

그러나 J은 J의 보통재판액 소재지인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전국적 관할합의를 하였다. 법원의 심리 적정을
위해 이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해 J의 주장은
타당하다.

II 설문 (2)

1. 본질정리

합의 관할이 채권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문제된다.

2. 관할 합의의 효력

(1) 원칙

① 합의 내용대로 관할이 변동된다 ② 전국적 합의라도 당사관할
이므로 다시 관할합의를 할 수 있고, 변동관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법원에 관련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전국적 합의를 한 경우 현저한 지면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 사유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관할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은 관할 합의의 효력을 받는다.

2) 특정승계인



i) 채권승계인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곤 할 것여서, 관할법원의 효력은 특정승계인
에게로 미친다.

ii) 물권 승계인

물권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의 효력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특정(特)항은 명(明)시(示)하지요.

3. 1문항의 결론 및 그 이유

(1)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 - 소극

~~채는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채권승계인~~ ~~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그 이유

채는 채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승계인으로서 권리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채 관할법원의 효력은 채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III 설문 (3)

I. ~~논점정리 - 이중판정의 구속력~~

~~소송은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

(~~제38조 1항 및 2항~~)

1. 문제의 소재 - 관찰위반 이종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관찰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찰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34조 1항~~) 이송결정에 따른 즉시항고에서 이송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에 따른 재항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된다.

2. 관찰위반시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1) ~~원칙~~ 문제점

① 제39조는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 제34조 1항은 법원이 이송가능하다고 규정한 불 이송신청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관찰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이송신청 배척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2) ~~판례~~

1) 원리

관찰위반에 의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에서 당사자에게 관찰위반 이송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관찰위반이유로 이송신청을 해도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해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기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

2) 이송결정 취소에 따른 재항고의 경우

법원내 항소장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 즉항고가 허용되지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항소 - 법원에겐

피고의 관할이 맞을 보라고 다른 이송신청권과 균형상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이송신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재판하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4) 결론

관할이 맞는지 여부 피고 관할이 맞도록 위해 이송신청권을 허용할지 묻고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부담한 판단이 어긋난 경우, 불응하게 시정할 기호를 부여할) 타당해 다시설이 든다.

(5) 재판

따라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법원은 재항고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끝)

[문제 2]

I 설문 (1)

0.5

1. 문제의 소재 - 이송결정의 구속력 (제38조 1항 및 2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이송받은 대법원이 반송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정서

(1) 문제점

전속관할을 위반해 이송한 경우도 제38조 1항 및 2항에 따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2) 학설

① 비구속설은 법원의 결정으로 전속관할을 배제할 수 없고, 전속관할 위반은 절차적 삼고이유에 해당하므로 구속력을 부정한다. ② 구속설은 제38조가 전속관할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지연 방지 위해 공익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③ 전속설은 전속관할 위반 시 원칙적 인정하지만, 실속관할 위반시 구속력을 부정한다.

(3) 판례

1) 원판

이송결정의 구속력은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것, 이송 반복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피해야 할 공익상 요건이 비록 불충족 때,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해 이송한 경우도 마찬가지



기상금/실로 이중된 경우

상금실에도 미친다고 하면 당사자의 실금의 이익이
박탈되고, 이중받은 법원이 법률상인 대법원인 경우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에 기회의 박탈되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실금관탈 위반의 이중결정 계속력도
상금실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정도

제 3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속관탈을 위반한
이중결정의 경우도 계속력을 인정하기 타당하나, 실금의
이익이란 절대적인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금관탈을
위반한 상금실도 이중결정은 계속력을 부정할 것이다.

(5) 사안

실금관탈을 위반한 상고실의 경우 이중결정의 계속력을
받지 않는다.

3. 결론 - 반송 가능

대법원도 이중한 법원으로 반송이 가능하다.

II 설문 (2)

1. 문제의 소재 - 비법인사단의 의의는

① 사단성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②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③ 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된 경우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무엇을~~ A를 대표자로 둔
임원과 대표 회의 등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개인이

보존행위를 단속으로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2.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방안 - 국무원 권한이 수행~~

(1) ~~공동 공유필수적 공동소~~

2. 비법인사단 소송수행 - 보존행위의 경우

(1) 종래 判例

종유물어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종회결의를 거쳐 국무원이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최근 判例

민법 제 263조 종유물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규정할 뿐, 공유나 합유처럼 국무원 각인과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유가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종회~~ 종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종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국무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식을 할 수 있고, 국무원도 그 대표자가 하거나 종회결의를 거쳐서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는 보존행위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3) 사안

甲은 그 대표자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甲은 관리인을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공동부분 변정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

[문제 3]

I 문제의 소재 - 제소전 사망의 차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를 말하며 ~~대립당사자주의~~를 대립당사자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반해 그 취급이 불제된다. 원고는 사망 전 변호사 선임 및 특별수권을 부여해 적법성이 문제된다.

I 설문 (1)

1. 문제의 소재 - 제소전 사망

원고가 소를 제기한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가 사망 전 변호사 선임 및 특별수권을 부여했는데 원고가 사망한 경우 변호사가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2.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 전 사망

(1) 제95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취외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했는데 소송대리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를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이러한 소는 적법한 소 제기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제233조 1항이 위촉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3) 상속 - 상속대리권

소제기 전 사망 시 대리권이 소멸되어 소가 적법하면, 제 95조, 제 233조, 제 238조는 소송 중 사망한 경우 적용되므로 제소 전 사망의 경우 표시정당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4) 결론

제 95조에서 상속자가 사망한 이상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원)의 타당하다.

(5) 사건

A 변호사가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은 소가 적법하고 그 소제기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

3. 결론

A 변호사의 소제기는 적법하다.

II 설문 (2)

1. 물제의 소재 - 종달기간

제소 전 사망 시에도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그에게 적법하게 종달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상속인의 기간 도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는지 묻게 된다.



2. 소송절차의 중단

(1) 절차 중단의 요건

.5

소송의 대상이 상속될 수 있는 법률관계이고, 상속인이 존재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 중단 여부

1)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상사과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계속해야 한다(제 233조)

.2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1) 상속재가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시 절차가 중단되며, 상속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제 238조)

1) 상속재가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속재가 시 절차가 중단되며, 상속기간은 진행한다.

따라서 판결정본을 송달 받고도 상속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3) 사망

.5

죽은 사망 전 변호사 A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특별수권까지 부여했으므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기간이 진행되고 기간도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된다.

3. 결론

.5

죽은 판결정본 송달로 인해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다.



Ⅱ 실문 (3)

나 .5

1. 문제의 소개

변환사가 특허수권을 얻지 못했다면, 누락상속인의
기관 또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는지 및 수계신청과
항소제기 가능여부 묻혀진다.

2. 일부 상속인을 누락한 상소의 효과

(1) 수계신청한 일부 상속인 스스로 상소한 경우

1) 공동소송종류 및 동상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소송목적과 관련하여 합의관청을
오차리 만능으로 동상공동소송 관제이다. ② 제166조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공동소송인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수행한다.

2) 判例

제1심 판결의 원력은 누락 상속인들에게도 그들의 상속비율
만큼 미치므로 항소기간은 진행되고 제1심 판결 중
누락된 상속인의 상속비율 부분은 그들이나 대리인이 항소
하지 만능이면 항소기간 도리로 판결이 확정된다.

3. 누락상속인 구제방안

(1) 문제점

수계신청한 일부 상속인이 스스로 상소한 경우, 누락된
상속인들의 판결은 항소기간 도리로 확정되는 바.

구제책이 묻혀진다



(2) 특許

① 상호제기 특별수권 예외로 보아 무효이므로 제1심 판결정본
 송달로 중안되나 미확정상태라는 견해 ② 특허상속인에 대해
 사실상 절차가 중안되고 판결이 선고되지 않거나 중기판결한바
 견해가 있다.

(3) 검토

명문대 규정 없이 국제수단을 인정할 수 없고, 상호기판
 도리로 판결 확정시 특허보관상소로 국제방문 수 있다.

4. 법의 수계신청 거부 -정곡

법은 스스로 상호하면서 수계신청이 가능하다

5. 수계신청할 법원

수계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은 중안된 법원에 수계해야
 하고 상호실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6. 상속인 법의 무 명의 항소장 제출 및 수계신청 거부 -소극

상속인이 항소장 제출 및 수계신청할 경우 불응기간판다

.5 (점)

[문제 4]

I 설을 (1) ㉠

1. 문제의 소재 - 표시정정 0.5

표시정정은 당사자로 등록된 과가 복직법칙에 표시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이다. 제소 전 사망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가능 및 표시정정하지 않은 경우 즉각이 문제된다.

2. 제소 전 사망

(1) 문제점 1.5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제기한 경우 ① 보정되지 않는 한, 사망자를 당사자로 등록하나 ② 보정하는 경우 상속인을 실질적 당사자로 등록해 표시정정을 허용할지 문제된다.

(2) 判例 1.5

죽은 자를 피고로 표시해 제소한 사건에서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라면 그 표시를 잘못된 것이라 인정되면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로부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학설 1

① 표시정정설은 당사와 본인 및 소송정체를 위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해야 한다고 하고 ② 피고정정설은 피고는 사망자로 등록되고, 상속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안으로 피고정정이 도입된 취지에 따라 이를
피고정정으로 허용하고자 한다.

(4) 정도 0.5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오기에 의해 볼 수 있어, 표시정정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3. 피고 표시 미보정시 소적법성 - 소극 1.5

피고 표시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사망자로
보아 당사자능력 흠결로 소각과 될 것이다.

4. 나머지 2의 표시정정 적법성 - 적극 0.5

무엇을 나머지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제기한 것으로 실질적 피고는
상속자인 2로 볼 것이므로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인 2로 표시정정이 가능하다.

Ⅱ 설을 2의 3

1. 음제이 고제 - 시효 중단 1.5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 여부는 소제기 시 효력이
발생한다(제 265조) 소제기 시의 시효를 표시정정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소제기 시기

(1) 원칙

소제기 때는 소원정시에 발생한다(제 265조)

(2) 예외

재판상 정국은 소송의 각과,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효력이

있다.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시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본다.

(3) 사망자 상으로 소제기된 경우 시효중단(특례) /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인정한 판결은 당연히 효력으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재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상속자에게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
소송정정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조 소장이 적용되지 않고
간과해 불판결판결 판결도 마찬가지라 한다.

3. 구상금채권 고액시효 중단 여부 - 적극 0.5

무엇을 상속인으로 당사자소송정정신청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구상금채권이
고액시효는 중단되었다. (이리여백)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